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기업들, 많이 풀리는 수도권 집중 불보듯

개발위한 해제→주민 불편해소...30만㎡ 이하 지자체에 해제권한

공장·부대시설 등 증·건축 허용...“수도권 쏠림 보완책 마련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내 그린벨트 개발 완화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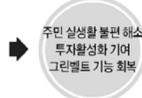
선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의 그린벨트 면적은 247.01km로 534세대 1079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총량에 따라 총 32.59km 중 20.41km를 해제했으며, 향후 해제 가능 물량은 12.18km(369만평)이다.

전남지역의 그린벨트 면적은 271km로, 전체 전남 면적의 2.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 1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

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한 곳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영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 전체 그린벨트 3868km 가운데 수도권인 경기도의 면적이 1175km(30%)나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을 계기로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풀려 기업들이 비수도권보다는 수

도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한 식품·의약품·화학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및 의뢰기기와 비의뢰기기의 구분 기준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용 등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논의했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거기까지” ‘성완중 리스트’에 올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흥준표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집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 도중 카메라가 가까이 접근하자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억 수수 의혹’ 흥준표 내일 검찰 출두

‘성완중 리스트’ 8명중 처음...검찰, 보좌진 잇따라 조사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흥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흥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흥 지사에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완중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흥 지사가 처음이다. 흥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흥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 받았다. 그는 당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흥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사장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흥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흥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전날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20층 규모 특급호텔 ‘가시화’

광주시와 11일 MOU...교통 영향평가 등은 넘어야 할 산

광주신세계가 도심 내 지상 20층짜리 특급호텔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6일 광주시에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광주지역 랜드마크형 관광·문화·쇼핑시설인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MOU에 명기될 양측의 가장 ‘사업계획

안’을 살펴보면 광주신세계는 예산 6000여억원을 들여 서구 화정동 12~13번지 일원인 신세계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 7600여평에 특급호텔 등을 건립한다.

신세계이마트(5000평)와 주차장(2600평) 부지는 현재 광주신세계 소유이며, 개발규모는 연면적 9만5000평(지하 7층~지상 20층)이다.

10~20층에 들어설 특급호텔은 지역 내 최대규모인 250실 내외로 지어질 예

정이며, 호남 최고의 시내면세점(6층), 해외 명품브랜드 매장 등을 갖춘 백화점과 마트(지하 1층~5층)도 입정한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발사업 시행 및 준공 시기 등 협약서 안과 개발일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기본계획과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오는 2019년 7월 이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유가족 “수용 못해” 반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맡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한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다.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조사3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한다.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만약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 시행령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임 특허청장에 최동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임 특허청장에 최동규(56) 주 케냐 대사

를 발탁했다. 최 신임 청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29호로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통상분야 전문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조직관리 및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FTA 등 국가간 통상협상 업무를 오랫동안 해 협상 능력과 국제 감각을 겸비, 국제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jkpark@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직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두암신협 본점 263-0136 (말바우사거리)

두암신협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두암신협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 민사 · 가사 · 행정

[보조금사기 · 금융사기 / 성폭행 · 성추행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NAVER 검색엔진 대비율리워 승려번호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